

4. 3 일

21 124

2018. 4. 3 (198. 4. 3)

IMF 위기하의 환경관리와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박 영 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환경위기한파대비 필요

어느 날 신문에서 읽은 글이 생각난다. 최근 불거진 <북풍이슈>가 뜨자 우리 사회의 큰 불안요인이 되고있는 <IMF 이슈>가 실종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면서 우리 사회에 복수의 이슈가 병존하는 <픽쳐 인 픽쳐(PIP)>기능이 없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

지난 12월 5일 이후 돌입한 국제통화기금사태에 접하면서 그토록 국내외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물 기근 경고에 따른 예비나 수년 내에 닥쳐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대비 등 외면해서는 안되는 많은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은 논의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오늘의 현실이다. 지난 4개월 동안에 부도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면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환경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문제와 환경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는데 있다. 환경을 살려야 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환경이 살아야 경제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데서 IMF위기 하에서도 환경관리는 소홀히 할 수 없다.

1만불 소득이면서 3만불 소득수준의 생활양식으로 흥청대고 있을 때 외환위기 한파가 닥쳐왔듯이 우리는 어느 순간 환경위기 한파로 더 큰 재난에 부딪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환경관리측면에서 보는 IMF 이해와 대책

IMF 위기하의 환경관리에서 우려되는 바는 정부와 기업의 재정긴축책으로 인해 제반 환경관련사업추진이 위축되는가 하면 무분별한 성장위주의 개발논리가 기승을 더 떨칠 것이라는 데 있다.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온 요인과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원인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제의 회복은 노력여하에 따라 회복가능하지만 환경은 일단 파괴되면 그 회복은 쉽지 않다는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중시한 나머지 경제회생만을 노릴 경우 성장위주의 개발논리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환경보전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IMF의 근본원인을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와 필요하면 쓰고보자는 공급위주의 사고방식과 정책 그리고 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위기의 극복은 사회와 경제를 저비용-고효율 그리고 공급관리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경제와 사회를 친환경적인 구조로 전환해서 경제와 환경을 함께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의 대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책전환은 용이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 다행인 것은 IMF위기가 잘못된 구조를 조정하는 일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을 두고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IMF위기하의 환경관리행정에서의 기대해볼 수 있는 변수는 뭐니뭐니해도 정부가 어떻게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이 과정은 '92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21>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바이지만 환경관리에서 사회구성원 개개인과 민간단체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환경행정의 실효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고있다. 재정긴축하에 놓인 우리의 환경관리에서는 이들과의 협력이 더더욱 필요하다.

작은 정부의 환경행정과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체들과 지역사회운동체들은 오래전부터 경제와 환경을 함께 살리는 운동으로서 자원절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녹색소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운동의 추진방법은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녹색소비문화운동은 기업의 녹색화와 정부의 녹색정책을 견인해낼 수 있는 민간환경단체의 중요한 활동이다. 이 운동의 성패가 IMF위기극복을 판가름한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제한된 지면이어서 민간단체의 역할을 깊이있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 다만 한 가지 새로운 역할을 추가해서 지적한다면 최근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업자 근로사업>에서의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문제이다.

이미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이정권 교수는 1930년대의 미국의 뉴딜정책을 적시하면서 IMF실업구제와 수자원 보전을 연계한 녹색댐 건설을 제안한바 있으며 유수의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을 마찬가지로 양산된 실업자들과 함께 전개하기로 발족된 바 있다. 이 운동은 산림청이 후원한다고 하고 있어 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보도에 의하면 환경부는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창출작업>의 일환으로 3만명의 실업자에게 환경관련업무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예산 및 인력배치 등 실무문제를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이들을 3~12개월간 임시로 고용해 ①쓰레기 투기단속 ②국립공원과 공공지역 쓰레기 수거 ③하천환경 정비 ④상수원 보호구역 내 쓰레기 수거 및 감시 ⑤오염물질 배출단속 ⑥재활용품 선별작업 ⑦황소개구리 제거작업 등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이들의 임금은 정부예비금으로 지급되며 정부의 다른 실직자 사업과 마찬가지로 월 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 '98. 4. 1)

지난 2월 말로 130만명에 이른 대량실업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다행스러운 계획이다. 그러나 이 작업의 고용(?)기간과 업무의 내용 그리고 임금(?)수준으로 미루어 생계를 책임지는 취업으로 간주하고 추진한다고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행정자치부가 <공공자원봉사사업>으로 명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이들의 근로사업의 성과가 생산적인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이 사업은 단순한 생계보조사업으로 근로업무의 성과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참여자들에게 상대적 부당대우로 근로의 사기를 저하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업무내용의 경우 오히려 이들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운동에 헌신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쪽이 일의 성과나 참여의 의미를 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이 작업은 민간환경단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작은 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막고 그리고 민간환경단체들의 활동역량을 현실행정에 기여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된다. 일에 따라서는 정부보다 민간단체가 더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경우가 그렇다. 그 근거는 참여자들의 자발성발휘는 민간단체와 함께 할 때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IMF위기하의 환경관리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지금까지의 활동에서처럼 문제를 고발하고 저항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하고있는 실천사업전개는 계속하는 것이다. 거기에 추가해서 민간단체는 지역사회의 환경개선과 보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집행에 적극 참여하여 권리를 분담하고 책임을 함께 지는 자리로 자리옮김을 해야 한다.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려야 하는 IMF위기극복의 과제는 민간단체의 자체정비와 역할의 변화도 더 붙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시점에서의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올바른 파트너십 구축에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구성은 더 이상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주체라는 의식을 철저히 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요원들은 더 이상 관료우위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바른 행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환경관리에서 원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환경훼손을 담보로 하는 생산활동을 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부추기는 등의 수요를 강요하는 물품생산을 해서는 국내적으로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기업의 IMF에 대비한 구조조정이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제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밀려오고 있는 그린라운드(GR)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의 <의제21>에서 강조되고 있는 삼중고리원칙인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간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데서 IMF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

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일은 오늘의 세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지상명령이며 이 과제의 수행은 3자의 상부상조에서 가능하다.

SAMSUNG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 플라스타워 9층 (우)135-280

환경안전팀 3458-3033~7

환경연구팀 3458-3140~4 Fax. 3458-3039, 3149

원고청탁서

안녕하십니까 ? 삼성지구환경연구소 계간지 '그린삼성' 편집실입니다.

'그린삼성'은 산업계의 환경·안전·보건에 관하여 정책 및 사업 연구결과와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삼성그룹의 환경안전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린삼성'은 정부단체, 학계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유관단체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삼성 98년 봄호를 준비하면서 아래와 같이 박영숙 소장님께 원고 청탁을 드리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 게재호 : 98년 봄호
- 컬럼명 : IMF시대의 NGOs의 역할(특집 "IMF 위기하의 환경관리" 중)
- 내 용 : 경기침체하의 환경관리를 위해 (정부, 기업과 차별화하여) 민간환경단체들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정리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원고마감 : 1998년 3월 31일(화요일)
- 원고발송 : 원고는 팩스(02-3458-3149)로
- 필자의 3 x 4 사진은 빠른우편으로 보내주시지요.
- 원고주실 때 ① 주민등록번호 ② 주소 ③ 실명 은행계좌 번호를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그린삼성 편집실, 장 기운 대리 (Tel. 02-3458-3144)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박 종 식 소장
(직 인 생 략)